

## 실물경제 지원강화 방안 - 4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

2017. 1. 17.

###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과제Ⅰ)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 1

(과제Ⅱ) 미래 신성장 분야 효율적 지원 시스템 구축 ..... 3

(과제Ⅲ) 2단계 기술금융 발전 로드맵 ..... 10

(과제Ⅳ) 새로운 구조조정 틀 마련방안 ..... 16

## (과제 I)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 1 추진배경

- '17년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가 가중될** 우려

➔ 산·기은,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자금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2 주요내용

- ① **(총공급)** '17년중 산은·기은,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전년(178.7조원) 대비 **8조원** 늘어난 **총 186.7조원** 공급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전년(121.4조원) 대비 6.8조원 증가한 **128.2조원** 공급
- **중견기업 성장기반 확대**를 위해 전년(19.6조원) 대비 2.2조원 증가한 **21.8조원** 공급

< 최근 5년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계획 >

(단위: 조원)

기관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산은	51.2	55.9	63.0	61.0	62.5
기은	51.0	53.0	56.0	55.0	58.5
신보	43.5	46.7	44.4	43.7	45.7
기보	18.4	18.7	19.2	19.0	20.0
합계	164.1	174.3	182.6	178.7	186.7

- ② **(중소기업 지원)** 창업·성장·제기지원 등 기업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수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유도

- **(창업)** 우수 아이디어·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기은, 신·기보의 **창업기업 지원** 자금 확대(37.2조원 → 40.3조원)
  -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창업 단계별**로 창업교육·기술이전·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강화(신·기보)

- 1 -

- **(성장·성숙)**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 구축

- 대출·보증 이외에 **보증연계투자, 직·간접투자** 등을 통한 투자확대

\* 보증연계투자(신·기보) : ('16) 750억원 → ('17) 850억원 (+100억원)  
직·간접투자(기은) : ('16) 2,800억원 → ('17) 3,800억원 (+1,000억원)

- **신위탁보증 시험사업**을 통해 은행 **자율적**으로 기업 상황에 맞는 **보증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재기지원)** 성실 실패기업에 대해 **재창업지원 대출<sup>1)</sup>** 및 **재기지원보증<sup>2)</sup>** 공급을 확대하고 재창업기업 **보증수수료 감면<sup>3)</sup>**

\* 1) 기업은행 : 지원규모 1,000억원, 최대 1.3%p 금리감면 우대

\* 2) 신·기보 보증공급을 '16년 실적 12억원의 4배 수준인 50억원 이상 확대

\* 3) (현재) 1.2% → (개선) 1.0%

- **(P-CBO)**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sup>\*</sup>**을 통한 **유동성 공급**

\*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 지원(1.3조원), 신규 회사채지원(0.3조원) 등

- ③ **(소상공인 지원)** 영세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전년대비 1조원 늘어난 **12조원** 공급 (기은)

-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비대면 **소상공인 전용 상품 출시**

\* 지원규모 3,000억원, 최대 0.5%p 금리자동감면, 기업당 최대 2~3천만원

-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④ **(중견기업 지원)**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공급을 지속 확대(산은)

-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견기업 200여개를 선정하여 금리우대 등 **특별자금(2.5조원)** 공급 및 경영컨설팅 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5,000억원** 운영(2월)

### 3 향후일정

- '17.1/4분기중 정책자금 공급을 **전년 대비 조기집행 예정**

\* 정책자금 집행률 : ('16.1/4분기) 23%, 42.7조원 → ('17.1/4분기) 25%, 46.7조원

- 정책자금 공급 실적을 **분기별 점검**

- 2 -

## 1 추진배경

- 현재 각 부처 및 연구원(추천기관) 등 기관별로 신성장 산업을 선정
  - 이를 감안하여, 정책금융기관도 제각각 신성장 기준을 운영 중
- ➔ 이에 따라 정책금융 지원과정에서 편중·중복 지원 등 비효율성이 노정된다는 지적이 제기

- ① 특정분야에 정책자금지원의 쏠림현상 발생
- ② 각 부처에서 발표한 기준을 인지 못할 경우 신성장 지원에서 누락
- ③ 실제 자금집행 시기 면에서도 失機하는 사례 발생
- ④ 시장과 기술변화에 적절히 대응 못하는 경우도 발생

## 2 주요내용

- ◇ 신성장 산업·품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동기준 개발
- ◇ 연도별 신성장분야 자금집행 계획 공동 수립·운영
- ◇ 체계적인 심사·추진체계 마련 등 신성장분야 효율적 지원 시스템 구축

### 1 자금공급 확대

- 첨단제조, 문화·컨텐츠,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성장분야에 전년(80조원) 대비 5조원 증가한 85조원 공급
  - 특히, 4차산업 혁명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산은의 약 20조원 신성장 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 지원해 나갈 예정
- \* 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 등 신성장 공동기준을 활용하여 관련 분야 포괄적 금융지원

- 3 -

### 2 미래신성장 기준 단일화

(사례) 각 정책금융기관별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  
→ 기업입장에서는 부처가 발표한 신성장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정책금융기관을 방문하였으나 자금지원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

#### ①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성장 기준' 마련(매년말)

- 정부, 연구기관으로부터 신성장 지원 대상을 추천(11월말)
- 자체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도 신성장 지원 대상 발굴(11월말)
- 민간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추천 접수(11월말)

※ '신성장기준 선정 위원회'를 거쳐 '신성장 위원회(후술)'에서 최종적으로 '신성장 기준'을 확정·의결

#### ② 연도중 신규 지원대상 발굴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매 반기별로 '신성장 기준'을 업데이트

#### ③ 이를 위해 '신성장기준 선정 위원회'를 구성·운영

\* 위원장(민간 전문가), 위원(학계, 전문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구성

#### ④ 금년에는 최초로 '신성장 기준'을 마련하여 9대 테마, 45개분야, 275개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성장 기준' 매뉴얼 배포

\* 첨단제조·자동화, 에너지, 환경, 환경·지속가능, 문화·콘텐츠 등

< 현행 >	<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별 신성장 분야 선정</li> <li>■ 각 금융기관은 이를 활용하여 기관별로 신성장 분야 각각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금융기관 공동의 신성장 분야 지원 기준과 절차 마련</li> <li>■ 주기적 신성장 기준 업데이트</li> </ul>
➔ 누락·중복·자의적 지원 우려	➔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자금공급

## 참고1

## 신성장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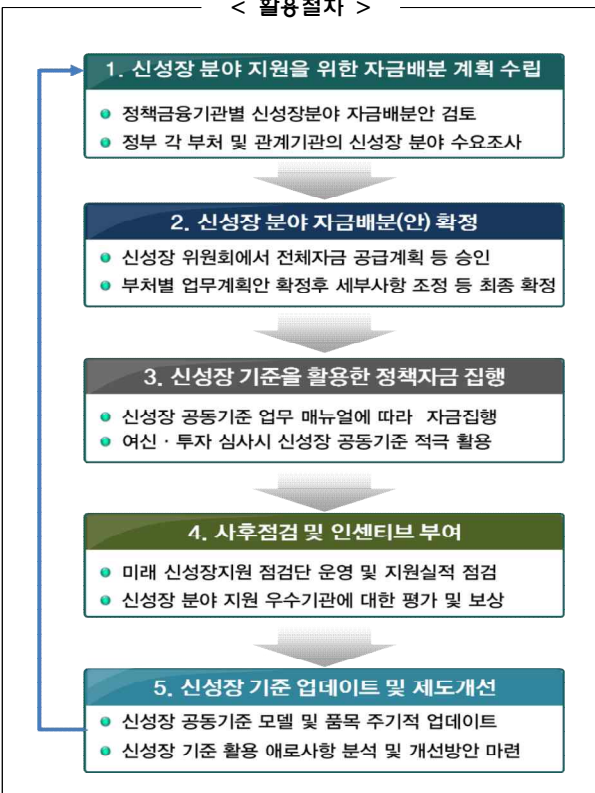
9대 테마	45개 분야	275개 품목
1. 첨단제조. 자동화	①신제조공정, ②로봇, ③항공우주 ④저탄소 동력장치	3D 프린팅 등 28개
2. 화학.신소재	⑤차세대 전자소재, ⑥고부가 표면처리, ⑦바이오 소재, ⑧융복합 섬유, ⑨다기능 소재	탄소나노튜브 등 37개
3. 에너지	⑩신재생 에너지, ⑪친환경 발전, ⑫에너지 저장, ⑬에너지 효율향상	3세대 태양 전지 등 33개
4. 환경.지속가능	⑭스마트팜, ⑮환경개선, ⑯환경보호	폐자원에너지 등 21개
5. 건강.진단	⑰생체조직재건, ⑱친환경 소비재, ⑲차세대 치료, ⑳차세대 진단, ㉑유전자연구 고도화, ㉒첨단영상 진단, ㉓맞춤형 의료, ㉔스마트 헬스케어, ㉕침단 외과수술	바이오시밀러 등 54개
6. 정보.통신	㉖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㉗능동형 컴퓨팅, ㉘실감형 콘텐츠, ㉙가용성 강화, ㉚지능형 데이터 분석, ㉛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39개
7. 전기.전자	㉜차세대 반도체, ㉝감성형 인터페이스, ㉞웨어러블 디바이스, ㉟능동형 조명, ㊱차세대 컴퓨팅	고속충전 등 24개
8. 센서.측정	㊲감각센서, ㊳객체탐지, ㊴광대역 측정	생체인식 등 19개
9. 문화.콘텐츠	㊵게임, ㊶음악·영화·방송·애니메이션·캐릭터, ㊷창작·공연·전시, ㊸광고, ㊹디자인, ㊺고부가서비스	모바일 게임 등 20개

- 5 -

## 참고2

## 신성장 기준에 따른 지원 프로세스

### < 활용절차 >



- 6 -

### ③ 신성장위원회 설치·운영

(사례) 정책금융기관별 제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편중지원, 중복지원하거나 일부는 지원대상에서 누락되기도 하고 자금지원 시기도 제각기 달라 A보증기관에서는 지원 가능함에도 B정책금융기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집행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

#### ① 신성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미래 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지원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 수행

- (구성) 위원장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 임명하고, 금발심 위원 등 외부전문가, 정책금융 부기관장, 각 부처 추천 전문가 등으로 위원 구성

#### - (주요기능)

- '신성장기준 선정 위원회'가 제안한 '신성장 기준 확정 의결'(12월)
- '정책금융협의회(후술)'를 거쳐 마련된 '신성장 분야 자금 운용계획' 승인
  - \* 정책금융기관 전체 총괄 계획, 각 분야별 계획 및 각 정책금융기관별 계획 등으로 구성
- 정부정책 및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당초 승인한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의결
- 월별·분기별 자금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전년도 실적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

#### ② '신성장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와 '신성장지원 점검단'을 별도 운영

-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정책금융 자금공급 계획안 마련, 자금집행 등 실무업무를 수행 →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산하에 '신성장 정책금융센터' 운영중
- (신성장지원 점검단) 정책금융협의회 참여기관, 신성장 정책 금융센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자금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

- 7 -

< 미래 신성장 분야 지원 조직 체계도 >



< 현행 >	<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금융기관별로 지원여부 시기 결정</li> <li>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간 유기적 협업 미흡</li> <li>신성장분야 지원 및 사후관리 애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기관별로 확정된 신성장 자금배분 계획을 총망라하여 총괄계획 수립 → 자금집행 → 사후점검</li> <li>자원배분 → 집행 → 사후 점검을 총괄하는 신성장 위원회 설치·운영</li> <li>효율적 자금지원·관리 가능</li> </ul>

### ④ 보상체계 및 DB 시스템 구축

- 신성장 분야 지원 실적을 핵심성과지표에 반영, **세미나 개최, 우수사례 포상** 등을 통해 금융권의 역할 확대
- 신용정보원(TDB)의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신성장 모델 업데이트, 지원효과 분석 등을 위한 **DB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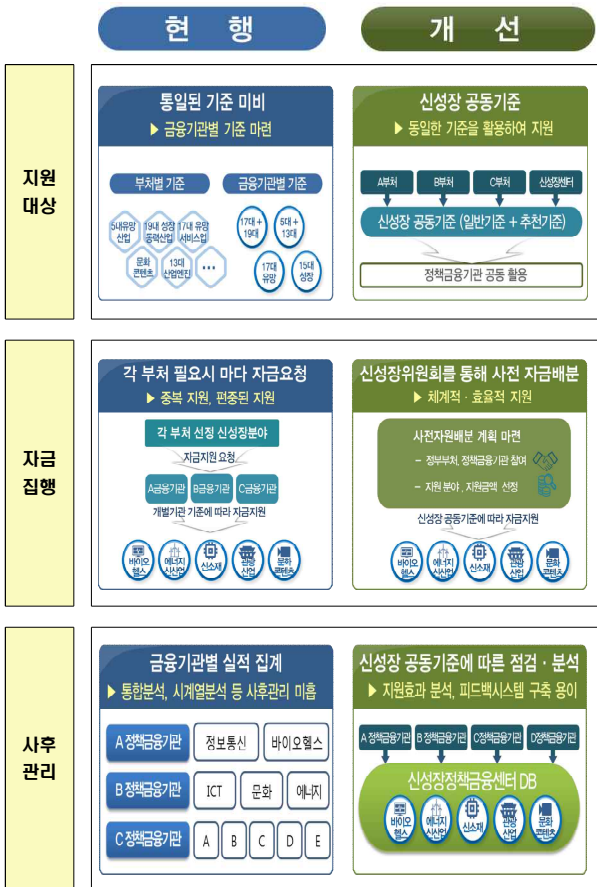
\* 산은의 신성장금융센터와 신용정보원 TDB간 업무제휴(MOU) 등 추진

< 현행 >	<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성장분야 지원에 따른 인센티브 미비</li> <li>신성장분야 지원 실적 집계 및 분석 시스템 미비</li> <li>단편적, 양적실적 중심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지표 반영, 우수사례 포상 등</li> <li>신성장 지원 시스템 및 DB 구축</li> <li>주기적 만족도 조사 및 효과분석</li> <li>정책자금 통합 관리·분석 가능</li> </ul>

### 3 향후일정

- ☐ 신성장 공동기준 시범적용('17년중)
- ☐ 신성장 분야 지원 효과 분석 및 '18년 자금공급계획 마련('17.하)

- 8 -



- 9 -

## (과제Ⅲ) 2단계 기술금융 발전 로드맵 추진

### 1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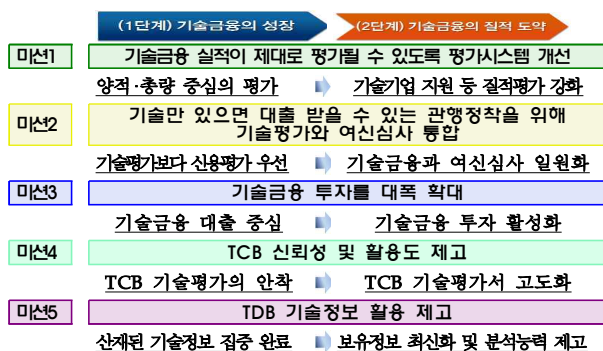
- 담보·보증 등 재무 중심의 금융 관행에서 기술력을 반영하기 위한 1단계 기술금융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다는 평가  
 \* '16.11월말 현재 기술금융 대출이 58.1조원 공급되는 등 기술금융이 기업의 혁신적인 자금조달 경로로 자리매김

- 질적 측면에서도 기술금융이 점차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자리 잡는 등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

-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금융이 명실상부하게 금융 관행으로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높은 질적 도약이 필요한 상황

- ① 은행의 기술금융 지원 경쟁 유발 정도가 낮고 질적평가가 미흡한 측면
- ② 기술평가 결과에 따른 기술신용등급과 신용등급이 2원화
- ③ 기술금융 투자(0.6조원)가 대출(58.1조원) 대비 1% 수준에 불과
- ④ TCB평가가 충분한 신뢰성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
- ⑤ 그간 TDB는 단순 정보집중에만 매진하여 정보 지원 수준이 낮은 문제

⇒ “기술만 있으면 대출·투자를 받을수 있는 관행이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2단계 기술금융 발전 로드맵」 추진



## 2 주요내용

### 1 TECH 평가기준 개선

(사례) 은행권 TECH 평가지표 중 38%가 **과거 기술금융 공급실적**에 영향을 받아 기 공급실적이 낮은 은행은 계속해서 낮은 평가(A은행 3회연속 6위)

-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은행권 기술금융 평가**(“TECH 평가”) **개선**

- 과거 기술금융 실적은 제외하고 **평가기간 내 실적만 평가**
- 자체 기술금융 실시 은행이 **우대** 평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인력 평가 요건** 등에서 **자체 기술금융 실시·미실시 은행간 정성평가 기준**을 구분
- \* 전문인력 : (자체 기술금융 실시 은행)기술평가인력 수 (미실시 은행)외부 평가서 감수 인력수
- **우수 기술기업** 지원시 TECH 평가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도록 **우수 기술기업 배점**을 2배(10점 → 20점)로 확대하되 **우수 기술기업**을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i) (저신용 기술기업) 신용등급은 낮으나 기술력이 높은 기업  
(평가기준상 배점 10점)

\* (안)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 10등급 이하 & T4 이상인 차주수 비중

(ii) (고성장 기업) 우수 기술력을 기반으로 **매출액** 등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 (평가기준상 배점 5점)

\* (안) 벤처 인증, 이노비즈 인증 기업 중 최근 3년도 매출액 증가율이 20%이상 기업

(iii) (미래신성장 업종) **신성장위원회**에서 미래신성장 업종으로 지정한 기업 (평가기준상 배점 5점)

< 현행 >	<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기술금융 지원 실적(누적)</li> <li>■ 우수 기술기업 평가</li> <li>* 기술등급 T4 이상 기업 지원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반기 실적 평가</li> <li>■ 우수 기술기업을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평가비중을 확대</li> <li>* ①저신용 기술기업, ②고성장 기업, ③미래신성장 업종</li> </ul>
⇒ 은행권 기술금융 순위 “고착화”	⇒ “기술금융 실적을 제대로 평가”

- 11 -

### 2 기술평가와 여신심사 일원화

(사례) 현재 기술평가 결과에 따른 기술신용등급과 여신심사 모형에 따른 **신용등급**이 2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기술평가와 신용평가 결과간 격차가 크게 발생할 경우 **신용평가를 우선시하는 보수적 여신관행**이 지속될 가능성

- 「**신용·기술평가 일원화 TF**」를 통해 **여신심사와 기술평가**가 통합된 **‘통합 여신모형’** 마련

\* (구성) 금융위, 금감원(데이터 축적, 검증 등 필요시 참여), 은행권, TCB, TDB 등

- **‘19년까지 통합 여신모형을 시범운영**”하고 ‘20년부터 본격 실시

\* 바젤 II에 따라 은행 여신모형 변경을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데이터 축적 필요 : 기술금융 실시(‘14.6월) 이후 5년(‘19.6월)

< 현행 >	<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평가등급과 신용등급이 <b>이원화</b></li> <li>■ 일반중기대출과 기술금융대출 <b>이원화</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된 기업 “<b>기술신용등급</b>” 산출</li> <li>■ 기술금융 대출 = “기업 대출”</li> </ul>

- ⇒ **통합여신 모형**이 정착될 경우 **기술금융**이 은행권 심사관행에 완전히 내재화 가능

### 3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

(사례) 기술금융 펀드를 중심으로 투자 방식의 기술금융 지원하고 있으나 **기술금융 대출 대비 1%에 불과** (기술금융 대출 58.1조원, 투자 0.6조원)

- 은행 자체 기술금융 투자 확대를 위해 은행과 계열관계가 있는 **중기특화 IB, 증권사** 등이 실시한 투자를 **은행 투자실적**으로 인정

- **성장사다리 펀드**가 기술금융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펀드 투자액 20% 이상을 기술금융으로 투자할 경우 **운용사에 성과 보수**\* 신규 지급 ※ 1,000억원 펀드 기준, 운용사 성과보수 약 4억원 지급

- ‘17년 내 기술금융 펀드 3,000억원 추가 조성

< 현행 >	<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금융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된 “기술금융 투자펀드” 중심</li> <li>⇒ 9개 펀드, 7,290억원 규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사다리 전체 펀드가 투자액 20% 이상을 기술금융 투자 실시</li> <li>⇒ 4조 7천억원 x 20% = 약 1조원 추가</li> </ul>

- ⇒ 성장사다리 펀드(총 4.7조원)의 20%인 **1조원 이상**이 신규 투자되고 **3,000억원** 추가 조성시 **총 2조원** 기술금융 펀드 운용 가능  
(금년 7,290억원 → 내년 2조원)

- 12 -

#### ④ TCB 신뢰성 및 활용도 제고

(사례) TCB는 T6 → T1 순서로 6단계로 나누어 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나 기술등급 6단계간 등급차이와 차이 정도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여 TCB 평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 TCB의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술금융을 공공분야로 확대 적용

##### ❶ 기술등급간 차이에 대한 설명력 제고를 위한 검증 실시('17.2월)

- 기술등급 결과와 매출액 등 성장가능성간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 등을 제고

\* 총 18만개의 기술금융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경영성과 개선 등을 분석  
→ 높은 기술등급일수록 경영성과가 높고 등급차이간 경영성과 개선도 측정

##### ❷ 기술등급 상승 기업을 위한 「우수 기술기업 특별은행」 도입 (산은, '17.2월)

- 재평가 후 기술등급이 상승된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 및 대출한도 상향 등 특별은행의 인센티브 제공

\* (대상) 기술등급 상승기업, (인센티브) 금리(△10bp), (한도) 100억 → 120억

##### ❸ 콘텐츠 분야 등 유망서비스 업종에 특화된 평가모형을 개발(3월)

##### ❹ 기술평가 재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 재평가 제도' 도입(1월)

\* 1년간 기술변동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서류심사로 평가 대체  
: (일반 재평가) 5일 이상 → (간이 재평가) 3일 이내 (비용 예상 50만원 → 약 30만원)

##### ❺ 정부조달\*, R&D 등 공공분야로 TCB 평가서 활용도를 확대

\* (현행) 10억원 이상 물품조달시 가점 → (개선) 시설공사 및 용역 분야로 확대

< 현행 >	<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중심의 기술평가 모형</li> <li>■ 최초평가와 1년 뒤 재평가절차가 동일하여 기업의 평가부담이 가중</li> <li>■ TCB평가서가 기술금융에 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업 특화 평가모형 다양화</li> <li>■ 간이 재평가로 평가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평가비용이 40%이상 절감</li> <li>■ 정부조달, R&amp;D 등 공공분야로 확대</li> </ul>

- 13 -

#### ⑤ TDB 인프라 정비

(사례) B은행 기술금융부는 TDB 정보를 활용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최신정보가 아닌 2014년, 2015년 과거정보가 있어서 활용이 제한적이었음

- ☐ 최신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하여 TDB 보유정보 최신화를 제고하고 TDB 서비스 제공대상 확대

##### ❶ TDB 보유정보 업데이트 주기를 1년으로 최신화(1월)

##### ❷ 은행권을 대상으로 기술금융 잠재 고객인 우수 기술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Tech-Industry 서비스(가칭)」 마련 ('17. 4월)

\* 산업별로 분포된 우수 기술기업 정보 DB(기술력·은행 대출정보 등)를 제공

##### ❸ 기업의 기술력 수준, 시장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 기술력 위치정보 서비스」 실시 ('17. 1월)

[기업 기술력 위치정보 서비스]

- ❶ 업종의 기술등급 분포 및 평균, ❷ 동종업계 평가기업의 기술경쟁력, ❸ 동종업계 및 평가기업 재무현황, ❹ 평가기업의 일반기술금융 대출잔액, ❺ 동종업체 부도·연체 현황 등

##### ❹ 은행·TCB에 한정된 이용기관을 대학, 연구소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비용을 대폭 축소 (1,000만원 → 200만원, 대학 무료 등)

< 현행 >	<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별로 업데이트 주기 상이 * (시장정보)1년, (산업정보)2년 등</li> <li>■ 산재된 기술정보의 축적에 집중</li> <li>■ 은행·TCB로 이용기관이 한정 * (이용요금) 1,000만원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보유정보를 1년 단위로 최신화</li> <li>■ 기술·산업·시장정보 분석기능 강화</li> <li>■ 대학, 연구소 등으로 이용대상 확대 * 대학 무료사용, 연구소 등은 200만원 수준으로 축소</li> </ul>

### 3 향후일정

- ☐ '17년부터 개선된 TECH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은행권 평가 실시
- ☐ 제도별 세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 예정('17.2월, 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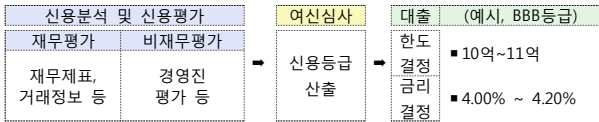
- 14 -



## ① 일반 중기대출의 여신심사·대출 절차

\* ①(신용분석 및 신용평가) 재무능력 평가 → ②(여신심사) 신용등급 산출 → ③(대출)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대출 조건(한도·금리 등) 결정

< 일반 중기대출 여신심사 및 대출 절차 >



## ② 기술금융 대출의 여신심사·대출 절차

○ 일반 중기대출 절차를 진행하되 다음사항이 추가

\* ①(기술신용평가서) TCB가 기업의 기술력과 재무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기술 신용평가서를 은행에 제공 → ②(여신심사 및 대출) 기술신용평가서를 반영하여 여신심사, 대출 지원여부, 대출조건(금리·한도) 등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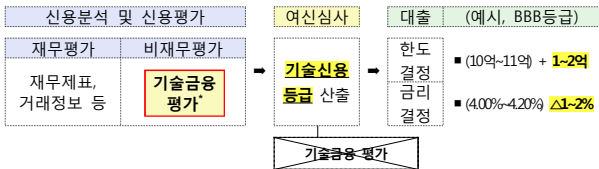
< 기술금융 여신심사 및 대출 절차 >



## ③ 신용·기술금융 통합시 여신심사·대출 절차

○ 기술평가가 여신심사 모형과 통합되어 기업 기술신용등급 산출

< 기술금융 내재화시 여신심사 및 대출 절차 >



- 15 -

## (과제 IV) 새로운 구조조정 틀 마련방안

## 1 추진배경

□ 현행 기업구조조정 체도는 ①채권금융기관 주도의 私的 절차(워크아웃)와 ②법원 주도의 公적 절차(회생절차)로 대별

- 워크아웃 제도는 신규자금지원에 강점이 있으나, 비금융채무 비중이 클 경우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
- 회생절차는 채무조정에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

➔ 최근 신규자금지원과 비금융채무 조정이 모두 필요한 구조조정 기업이 증가하여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정립할 필요

< 사적 구조조정 - 공적 구조조정 비교 >

구분	사적 구조조정	공적 구조조정
근거법률	기축법	채무자회생법
적용채권	금융채권(주로 채권금융기관)	모든 채권(상거래·해위채권 등 포함)
적합한 대상	채무구조가 단순(채권금융기관 위주)하고, 채권단의 신규자금지원만으로 회생 가능한 기업	채무구조가 복잡하고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전면적인 채무관계 조정이 필요한 기업
소요기간	정상회계회 의결까지 최대 65일 소요	회생계획 의결까지 최대 18일 소요
장점	유연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신규자금을 통한 영업력 유지	전면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재무 부담 대폭 경감
단점	비금융채무 비중이 클 경우 적용 불가, 비경제적 논리 개입 가능성	장기화, 절차 복잡, 신규자금 미비로 인한 영업력 훼손, 대외신인도 훼손(EOD 사유 해당)

□ 자금차입 구조 및 구조조정 기업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채권은행 중심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이 부진한 상황

\* 시장성 차입(회사채, CP 등) 증가로 채권은행의 역할이 축소되고, 채권단간 이견, 은행들의 추가대출 기피 등으로 채권은행 주도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이 곤란

➔ 채권은행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처럼 구조조정 펀드 등이 중심이 되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16 -

## 2 주요내용

### 1. Pre-Packaged Plan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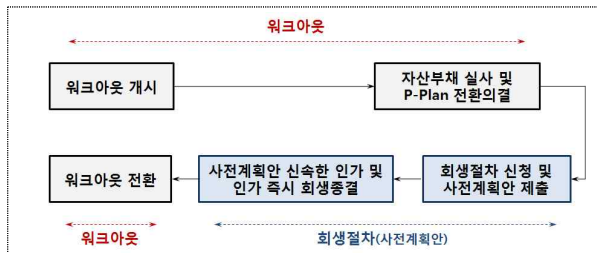
- 회생법원 설립(17.3월)을 계기로 기촉법상 워크아웃 등과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Pre-packaged Plan\* 활성화

\* 예)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등으로 전환

- 사전계획안 제도를 적극 해석하여 현행 제도로 정상화가 어려운 유형의 기업\*에 대한 효과적 구조조정 추진

\* 예)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시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비금융채무·약성 채무 등이 과다하여 채무관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 Pre-Packaged Plan 개요(안) >



< 현행 >	<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워크아웃(신규자금지원)과 회생절차(채무조정)의 장점 연계 불가능</li> <li>현행 제도로는 정상화가 어려운 유형의 기업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대 구조조정 제도의 장점 연계</li> <li>보다 효과적인 구조조정 추진 체계 마련</li> </ul>

- 17 -

### 2. 시장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마련

- ① (신용위험평가의 객관성 제고) 채권은행의 객관적 신용위험평가 모델 구축을 통해 **온정적 신용위험평가**로 인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이 지연되는 사례 방지

- 금감원, 신평사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모델**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17.1.)
- 금감원이 평가기준에 따라 **은행별 신용위험평가 모델 점검**(17.1.)

< 현행 >	<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정적 신용위험평가 유인* 존재</li> <li>* 단기간 내 대손충당금 적립, 경영실적 악화, 기업과의 장기 거래관계 등</li> <li>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위험평가 모델의 객관성 제고</li> <li>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적기 선정</li> </ul>

- ② (채권의 공정가치 산정)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독립적 평가기관을 운영하여 구조조정채권의 매각 지연 문제 해소

- 채권은행 및 매수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구조조정 전문가**(산업 전문가, 법정관리인 등) 위주로 구성된 **독립적 평가기관 운영**(17.1.)
-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 부과**(17.1.)

\* 예) 채권은행이 독립적 평가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치를 수용하지 않고 채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은행으로 하여금 해당 채권의 가치를 재평가하도록 하여 기존 평가액과 차액만큼 충당금을 추가 적립토록 하는 방안 등

< 현행 >	<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권은행과 매수자가 각각 회계법안을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채권의 가격을 협상</li> <li>가격에 대한 이견 발생시 조정수단 미비</li> <li>구조조정 채권의 매각 지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립적 평가기관에서 구조조정 채권의 공정가치 산정</li> <li>공정가치 불수용시 충당금 추가 적립</li> <li>구조조정 채권의 원활한 매각 유도</li> </ul>

- ③ (한도성 여신 지원 활성화) 정책금융기관 보증 등을 통해 매각 대상 기업에 대한 **은행의 한도성 여신\*** 공급 유도(17.1.)

\* 당좌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 등 기업 상거래 활동과 연계된 여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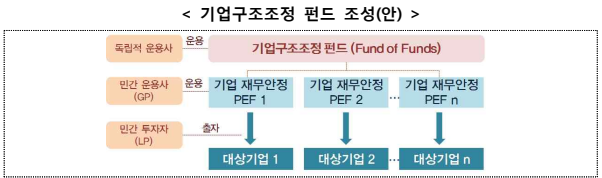
- 구조조정채권 매각 대상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저해하는 은행 내부규정\* 개정**(17.1.)

\* 은행 내규상 구조조정기업은 '은행에 손실을 입힌 자'로 분류되어 한도성 여신 제공 곤란

- 18 -

< 현행 >	<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소극적 여신 관행</li> <li>■ 은행 내규상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여신 제공 곤란</li> <li>➔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인 한도성 여신 확보 곤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금융기관 보증을 통한 은행의 여신 공급 유도</li> <li>■ 관련 은행 내부규정 개정</li> <li>➔ 한도성 여신 공급을 통해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제고</li> </ul>

- ④ (기업구조조정 펀드) 부실기업 인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구조조정시장에 충분한 자금 공급(17.1)
- (조성 목적) 기존 민간자금이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회생형 구조조정채권 시장에 선도적 모험투자 수행
  - (기본 구조) 母子형 펀드(Fund of Funds)로 설계하여 독립적인 운용사가 母펀드를 운영하고, 구조조정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子펀드 운용사로 선정하여 구조조정 추진
- ※ 기업구조조정 펀드의 규모, 자금모집 등 세부 운영방안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마련 예정



< 현행 >	<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구조조정시장 未조성으로 기대 수익률, 투자 회수기간 등 예측 곤란</li> <li>➔ 새로운 시장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려는 투자자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구조조정 펀드 신설</li> <li>➔ 선도적 모험투자를 통해 민간 구조조정시장 조성의 마중물 역할 수행</li> </ul>

### 3 향후일정

- ① (Pre-Packaged Plan 활성화) 정부·법원·국책은행 TF(17.1월~)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Pre-Packaged Plan(안) 마련(17.2분기)
- ②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금융연구원 주관, 17.2월)를 통해 의견수렴 후, 은행권 등 협의를 거쳐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마련(17.3월)